<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우려스러운 석유화학 빅딜 ”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거대한 부실부채 처리에 대해서는 입을 걸어잠근 채 정부와 금융권에 대해 출자전환 및 세제·제도상의 특혜만 요구하는가 싶더니, 대림산업과 한화종합화학은 구조조정 차원의 통폐합이 아니라 2개사를 3개로 분할하는 역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림과 한화가 의향서를 교환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은 언뜻 보기에는 업종 전문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폴리머의 전문화와 함께 NCC를 합병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렵고, 또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50대50 통합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9월 내각제 파동」까지 적당히 버텨보려는 속셈이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첫째, 대림산업과 한화종합화학의 NCC 통합과 폴리머 분리는 외견상으로 볼 때 한화가 최소한 3000억원, 많게는 5000억원 이상을 대림에게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폴리머를 서로 주고받기로 한 이상 에틸렌 생산능력 49만톤 및 75만톤을 50대50으로 평가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신설비와 구설비의 평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3000억-5000억원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따라서 한화가 차액만큼의 부채를 떠안는 방법으로 정리하거나, 추가출자를 감내해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2-EH 사업을 매각해 일정부분 보충할 수는 있어 보이나 매각대금이 기껏해야 1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에너지 및 한화에너지판매도 부채규모가 너무 커 매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결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둘째, NCC와 폴리머를 분리할 때는 기초유분의 공급방식과 가격산정방법에 합의해야 하는데 이 또한 합리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크게 보아도 에틸렌 수요는 LDPE, LLDPE, HDPE 등으로 107만톤에 달하는 반면, 프로필렌은 PP 45만톤에 국한돼 수급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에틸렌 및 프로필렌 가격등락이 비슷할 경우에는 큰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마찰을 빚을 것이 뻔하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기초유분 가격산정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것이 흔한 실정이라는 것은 석유화학 관계자들이라면 모두 인정할 것이다. 더군다나 50대50 합병기업의 경영권을 대림과 한화가 공유할 경우 일정 시일이 지나면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은 불문가지이다.

셋째, 플래스틱 가공부문은 어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화는 PVC 가공부문의 분사를 검토하고 있고, 대림은 매각 또는 분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린다. PVC 가공부문은 분사 이후 경영이 쉽지 않고, 대림의 PE 및 PP 가공부문은 분사 자체도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대림의 OPP필름은 덩치가 커 분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도 매각 가능성을 제로화시키고 있다. 대림에서는 부도기업의 OPP필름 라인을 인수해 대규모화하거나, OPP 라인을 인수한 후 대규모 매각을 시도하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착각일 뿐이다. PP 45만톤 및 OPP 5만5000톤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대림의 경영능력이나 인력, 기술을 평가할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림과 한화가 석유화학사업 통합 및 분리에 합의할 가능성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M&A를 시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여천단지의 대규모 빅딜의 종속적 입장을 피하면서 석유화학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대림산업과 한화종합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해당기업에 맡겨서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기 어렵고, 정부의 경쟁력 강화 의지만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재벌 및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은 자율의 한계를 지나친 지 오래이고, 강제적인 결론을 도출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9/4/26>

<화학저널 1999/04/12>